

中 “삼성 프로젝트 전면 지지” JY, 중국 산시성과 협력 다져

SAMSUNG

이재용 부회장, 中 시안공장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산시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다졌다.

19일 중국 산시성 당기관지인 산시일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8일 중국 서안에서 후허핑 서기와 류귀중 산시성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성상임위원회 왕하오와 리밍웬 서안시장 등도 함께했다.

산시성은 삼성전자가 시안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성과를 얻어내며 양호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후허핑 서기는 이 부회장을 환영하며, 삼성이 코로나19 초기 방역물자를 지원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 부회장도 삼성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도움을 받았으며 화답했다. 이어서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후허핑 서기는 삼성과의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시성에서 삼성의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할 것이라며,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발전과 상호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양국간 우호 관계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방역 노력을 실천하고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며, 내륙개혁개방 의지를 전면 실행하고 외자기업 조업 재개와 생산 복귀 강화 및 ‘방역 일상화’ 조건 하에서 물류와 인력 왕래에 도움을 주겠다고도 다짐했다.

이 부회장도 삼성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고 교류와 왕래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승 기자 juk@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린 법안 통과시켜 경제 발빠른 대응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만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21대 국회의 조속한 원 구성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마련해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고충과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김 원내대표 발언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

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맞서 (국회가)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해달라고 왔다. 21대 국회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한계가 될 것인데 경제 관련 정책 처방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후 본격화할 새로운 경제 질서에 경제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등장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도 대단히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법과 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은 한 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국회에 호소했다.

박 회장은 또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도 호소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밀린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빨리, 많이 통과해 달라. (21대 국회) 원 구성도 해야 하고, 마지막 국회라 경황이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하루하루(위기로 힘들어하는) 경제인들의 상황도 헤아려주길 부탁한

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급한 마음에 찾았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남겨뒀는데, 마음 같아서는 밀린 법안을 많이 통과시켜줬으면 한다”며 “하지만 원 구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도 이해한다. (하루빨리 21대 국회) 원 구성을 해 변화에 대응을 빨리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김 원내대표에 앞서 박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하러 온 것 같은데 경청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며 “박 회장께서 최근 벤 플리트 상을 받은 걸로 안다. 미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19일 서울 종로구 에너지전환포럼 회의실에서 (왼쪽부터) 홍중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부장,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이사,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수지 기자

“그린뉴딜, 글로벌 모범국가 핵심전략”

‘그린뉴딜’ 기자간담회
“한국형 뉴딜에 포함해야” 주장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뉴딜’을 이번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종로구 에너지전환포럼 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상사업 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홍중호 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그린뉴딜이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바꿈과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국형 뉴딜에는 ▲5G 인프라의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기존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결합 등이 포함됐다.

반면 그린뉴딜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

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관련 합동 보고만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뉴딜의 세부 계획안에는 그린뉴딜이 담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중호 대표는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린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글로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시급성과 중요성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 실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경기부양 ▲기업·산업 혁신 유발 ▲주민 소득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업회귀 효과 등을 꼽았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2050년에는 에너지 자립국이 되고,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태양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태양광 1GW를 설치하는 ‘솔라 스쿨’이나, 농민 소득 창출을 위해 전체 경지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솔라 파밍’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금융투자 최종적 책임, 투자자 본인”

» 1면 ‘은행 부실펀드 1조...’서 계속

한미지연금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우선 돌려주고,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다음 나머지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비율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최대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업계, 투자원칙 훼손... ‘배임 등 법적 리스크’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처가 금융시장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투자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거나 원금 손실 결과가 모두 투자자

에게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상품을 투자하면서 손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전이 안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나중에는 펀드판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투자자의 원금 보전 요구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제능력이 없는 운영사의 책임을 판매사가 떠안는 경우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에 이어 코로나19로 은행의 경영상황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상을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판매사에도 상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